



제8차 청년정책포럼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일시 2017. 4. 20 (목) 10:30~12:30
장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제회의장
주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8차 청년정책포럼

09:40-10:30	▶ 등 록
10:30-10:35	▶ 사회자 오프닝 사회 이종원 부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35-10:40	▶ 개회사 박용호 위원장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10:40~10:45	▶ 축 사 노 혁 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45~10:50	▶ 환영사 이교봉 원장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1세션〉 발 표	
10:50~11:10 (발표 20분)	발 표 1 ▶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발표 김기현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세션〉 토 론	
11:10-12:20 (토론 70분)	▶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토론 • 좌 장 이종원 부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패 널 김성욱 청년위원 ((주)잡매치 대표이사) 김기민 이사장 (청년연대은행 토닥) 김선영 단원 (2030정책참여단) 이병희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이철선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0-12:30	▶ 정리 및 참석자 단체 기념촬영

발 표
.....

제8차 청년정책포럼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김 기 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7.04.20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1. 문제제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 청년고용 핵심대상 정책 접근
 - 청년 NEET
 - 신규졸업자
 - 일자리 미스매치 직면한 대졸자

유럽연합(EU)

- ◎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추진
 - 학교 졸업 혹은 실직자
 - 4개월 이내 NEET 상태
 - 청년 취업 보장 정책 추진

청년 정책대상

일본

- ◎ 청소년 고용촉진법률(2015)
 - 신규졸업자(블랙기업대책)
 - 청년 NEET(서포트 스테이션)
 - 청년 Freeter

한국

- ◎ 청년 고용정책 대상 구체화
 - 고용보조지표(실질실업자)
 - 청년 취업준비자
- ◎ 청년 취업준비자 규모 추정 및
온라인조사(500명) 통해 정책방안
제시(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NYPI)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

02. 청년 취업준비자 정의 및 분석



02. 청년 취업준비자 정의 및 분석

	2차 자료분석	실태조사
자료	경찰조사/청년패널조사 (통계청/한국고용정보원)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조사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NYPI)
시기	2014-2016년/2007-2015년	2017년 3월
대상	15-34세/07년 당시 15-29세	19-34세(경찰 할당표집)
표본	3,300가구/10,206명	500명 온라인조사

03.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 및 추이

청년 취업준비자 규모 추정(경찰조사)

청년 취업준비자는 '16년 현재 64만 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줌.

전체 청년인구에서 취업준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9%이며 비경황 중에서 9.2%, 경황 중에서 1.5%로 나타남.

〈청년층(15-34세) 취업준비자의 유형별 규모 및 비중의 변화(2014-2016)〉

구분		취업준비자수(비중)			청년인구 중 비중(청년인구)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취업 준비자 유형	비경제 활동 인구	482,146 (89.3)	524,536 (84.6)	537,912 (83.7)	7.8 (6,158,587)	8.8 (5,995,040)	9.2 (5,821,918)
	시간제 취업자*	57,551 (10.7)	95,485 (15.4)	104,855 (16.3)	0.8 (7,267,268)	1.3 (7,295,200)	1.5 (7,254,098)
소계		539,697 (100.0)	620,021 (100.0)	642,767 (100.0)	4.0 (13,425,855)	4.7 (13,290,240)	4.9 (13,076,0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5

03.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 및 추이

청년 취업준비자 규모 추정(경찰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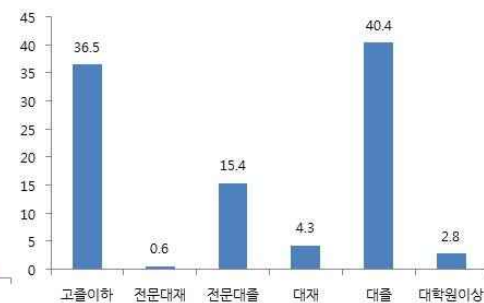
청년 취업준비자는 '16년 현재 남성이 여성보다, 25-29세가, 미혼이 대다수로 나타남.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졸자가 40.4%로 가장 높고 고졸 이하가 36.5%로 나타남.

〈청년 취업준비자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 분포(2016)〉



〈청년 취업준비자 교육수준별 분포(20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6

03.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 및 추이

청년 취업준비자 규모 추정(경찰조사)

청년 취업준비자 중 '16년 현재 노동시장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16만 명으로 29.8%를 차지함.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지 1년 이상인 청년 비중은 40.7%였고 1년이 안 된 청년들의 비중은 29.5%였음.

〈청년층(15-34세) 취업준비자의 노동시장 경험 여부(2014-2016)〉

구분		취업준비자수(비중)			청년인구 중 비중(청년인구)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노동 시장 경험	경험없음	139,105 (28.8)	155,785 (29.7)	160,361 (29.8)	3.9 (3,576,685)	4.4 (3,578,572)	4.5 (3,583,680)
	1년 이상	198,935 (41.3)	232,610 (44.3)	218,724 (40.7)	11.8 (1,683,038)	14.3 (1,623,994)	14.6 (1,499,051)
	1년 미만	144,106 (29.9)	136,142 (26.0)	158,827 (29.5)	10.4 (1,388,524)	10.6 (1,286,694)	12.4 (1,282,057)
소계		482,146 (100.0)	524,536 (100.0)	537,912 (100.0)	7.3 (6,648,246)	8.1 (6,489,259)	8.5 (6,364,78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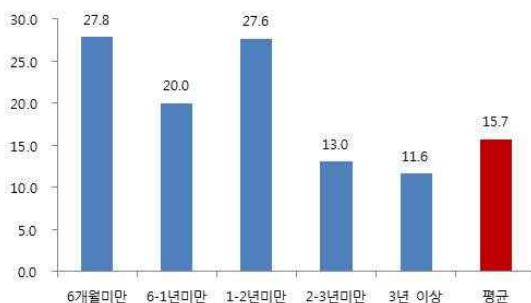
03.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 및 추이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온라인조사)

청년 취업준비자의 '17년 현재 취업준비기간은 15.7개월로 1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은 평일 24시간 중 4.6시간이었으며 입사지원서를 평균 17.3회, 6번 면접을 봄.

〈청년 취업준비자 취업준비기간 분포 및 평균(2017)〉



〈청년 취업준비자 취업준비활동(2017)〉



자료: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년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조사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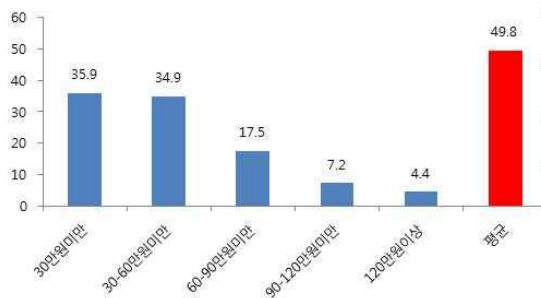
03.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 및 추이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온라인조사)

청년 취업준비자의 '17년 생활비는 49.8만원으로 나타남. 주거비는 18.6%가 해당되고 평균 28.7만원이었음.

취업을 준비하는 비용은 학원수강비가 20.8만원, 시험 응시료가 6.0만원, 취업자료 구입비가 7.4만원이었음.

〈청년 취업준비자 월평균 생활비 분포 및 평균(2017)〉



〈청년 취업준비자 취업준비비용(2017)〉



자료: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년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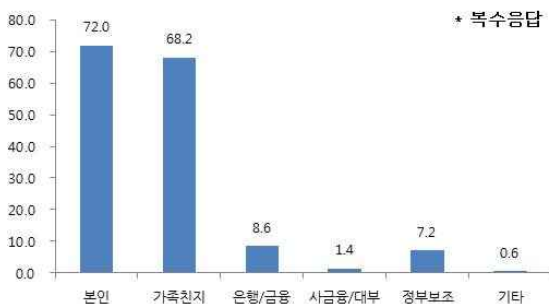
03.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 및 추이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온라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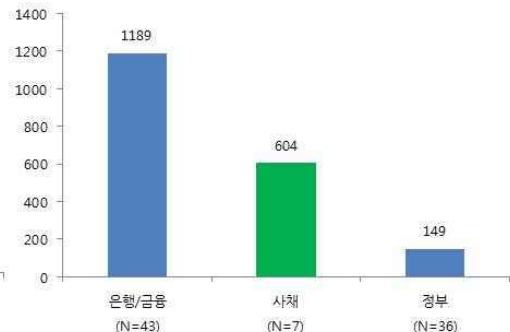
청년 취업준비자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은행/금융기관에서 대출자는 8.6%였고 사채는 1.4%가 대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은행/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1189만원, 사채는 604만원, 정부보조금은 149만원임

〈취업준비자의 생활비 조달방법 영역별 해당 여부(2017)〉



〈청년 취업준비자 은행/금융기관/사채 금액(2017)〉



자료: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년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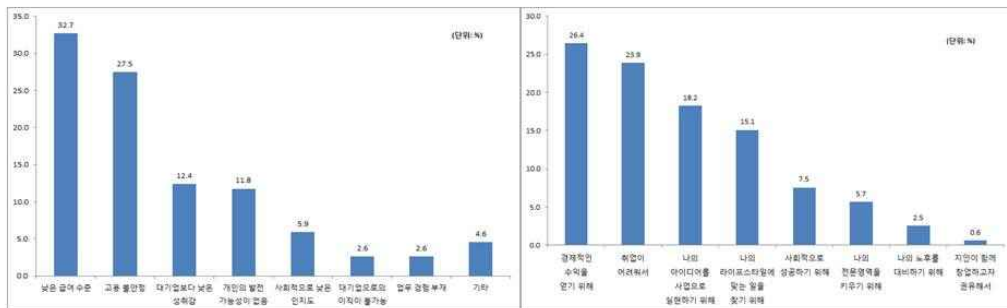
03.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 및 추이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온라인조사)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물어본 결과 69.4%가 있다고 응답, 원하지 않는 이유는 낮은 급여수준이 1순위

창업 의향에 대해서 31.8%가 있다고 말했고 창업 이유로 취업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24.9%로 높게 나타남.

〈청년 취업준비자 중소기업 취업 원하지 않는 이유(2017)〉 〈청년 취업준비자 창업을 생각하는 이유(2017)〉



자료: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년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1

03.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 및 추이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온라인조사)

청년 취업준비자에게 각종 시험 준비 경험(준비했다 혹은 준비 중)을 물어본 결과 절반이 그렇다고 응답

각종 시험 중에서 59.4%는 공무원시험이었고 공단/공사시험과 국가전문자격시험이 뒤를 이음.

〈청년 취업준비자 중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경험(2017)〉



자료: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년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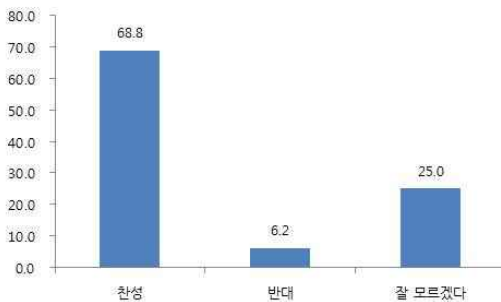
03.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 및 추이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온라인조사)

고용의무할당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이 68.8%였고 반대는 6.2%로 나타남.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서 찬성이 68.8%였고 구직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73.0%로 나타남.

〈청년 취업준비자 고용의무 민간기업확대 의견(2017)〉



〈청년 취업준비자 청년수당 및 구직연계 의견(2017)〉



자료: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년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3

03.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 및 추이

청년 취업준비자 취업동향(청년패널)

2007년 당시 취업준비자로 8년간 경찰상태 변화를 살펴보면, 5.0%가 한 번도 취업을 못한 것으로 나타남.

1년 이내에 취업으로 전환된 경우가 49.1%였고 4.3%는 8년째에 취업으로 전환됨.

〈청년층(15~34세) 취업준비자의 노동시장 경험 여부(2014~2016)〉

구분	8년(2008 ~ 2015년) 동안의 취업상태 변화 여부	
	빈도	[%]
미취업	30,617	(5.0)
취업	577,663	(95.0)
1년 이내(~ 2008년)	283,847	(49.1)
2년 이내(~ 2009년)	98,724	(17.1)
3년 이내(~ 2010년)	53,445	(9.3)
4년 이내(~ 2011년)	38,272	(6.6)
5년 이내(~ 2012년)	41,814	(7.2)
6년 이내(~ 2013년)	23,329	(4.0)
7년 이내(~ 2014년)	13,219	(2.3)
8년 이내(~ 2015년)	25,014	(4.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원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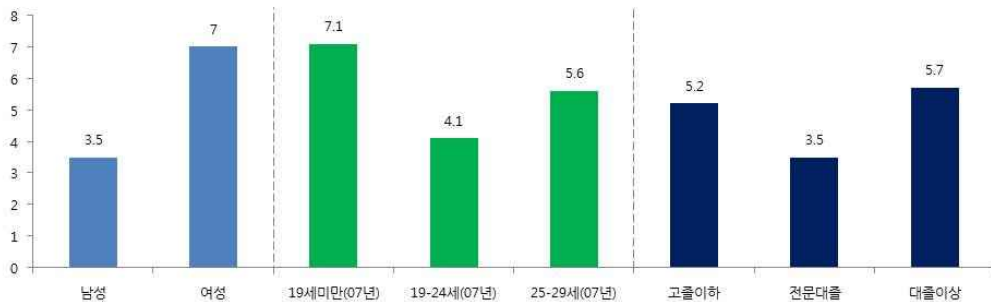
03.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 및 추이

청년 취업준비자 취업동향(청년패널)

2007년 당시 취업준비자로 8년 후 미취업자 중 남성보다는 여성이, 19세 미만이 경우가 높게 나타남.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졸이상이 5.7%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졸이 3.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줌.

〈청년 취업준비자 중 2007년 당시 취업준비자로 8년 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미취업자 분포(201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원자료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5

04. 정책적 시사점

1

취업 준비자들은 64만 명에 이르고
평균적으로 15.7개월 취업을 준비

2

청년 취업준비자 중 부모나 친지로부터
생활비를 도움 받는 비율이 68.2%로 높음.

3

한국은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비율이 매우
낮지만 장기 취업준비자 비율은 높은 수준

4

미취업상태에 있는 청년 취업준비자들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



자료: 한겨레신문, 취업생의 일상 열쇳말, '해우소' (2016년 10월 17일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working/766025.html>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6

04. 정책적 시사점

1

청년으로 취업 경험이 없는 미취업자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2

생애 최초 가입자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고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 확대 고민

3

자발적 이직자라도 장기간 취업준비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실업급여 지급 검토

4

장기적으로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통해 취업경험 없는 취약계층 지원방안 마련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h/cm/hm/main.do>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7

04. 청년 문제 정책적 해법

1

미취업자에게 구직활동과 관련하여 청년구직수당 도입 검토

2

청년수당을 구직활동과 연계 지급하는 방안이 73.0%가 동의

3

취업 경험이 없는 취업 준비자는 16만 명 선, 취업준비 비용은 최대 월 34만 원 수준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자료구입비 항목별 응답 평균의 합계액)

4

지원기간은 1년이 넘는 취업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적정기간 설정 필요

청년 구직촉진수당



자료: SBS 뉴스 리포트 '50만원 놓고 육신각신 (2016년 8월 4일자)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156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8

04. 정책적 시사점

1

한국에서도 유럽연합처럼 청년 고용 보장에 대한 선언 필요

2

단기적으로 청년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용한 수단 모두 동원

3

한시적 기간을 정해 청년의무고용 대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4

장기적으로 청년정책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정비 필요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

Youth Guarantee – a driver for reform



A. Accelerated reform
BE, BG, FR, HR, HU, IT, LT, LV, PL, PT, SI



B. Reinforced policy framework
AT, DE, DK, EE, FI, IE, LU, MT, NL, SE, UK



C. More limited reform
CY, CZ, EL, ES, NO, SK

▶ 유럽연합은 청년 실업자와 청년 니트(NEET)의 확산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고 청년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보장제를 2013년부터 추진함.

▶ 청년보장제는 25세 미만 청년들이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4개월 내에 실업자이거나 니트(NEET)일 경우 양질의 고용, 지속적 교육, 견습 또는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유럽연합 이사회는 청년보장제 이행과 관련하여 ① 모든 이해당사자 간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공공만이 아니라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모델), ② 조기 개입(니트 상태에서 개입하는 시점을 4개월 이내로 신속하게 대응), ③ 노동시장 통합(채용장려금, 임금보조금 등 실업자 지원과 니트와 같은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지원, 그리고 창업촉진 지원 등을 통합해 운영), ④ 유럽연합 예산의 적극적 활용(회원국의 재정투자 외에 유럽사회기금, 청년고용 이니셔티브 등 EU 재정 연계), ⑤ 제도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 개선(유럽정책조정주기제도(European Semester) 등), ⑥ 신속한 이행(2013년까지 실행계획 수립) 등 6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감사합니다



취업준비자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토론



토론_ 김성욱 ((주)잡매치 대표이사, 청년위원)

토론_ 김기민 (청년연대은행 토닥 이사장)

토론_ 김선영 (2030정책참여단 단원)

토론_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_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 성 욱

주식회사 잡매치 대표이사

취업준비자 정책지원 방안이 기존에 없었던 것은 아님을 전제로 할 때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 정책지원 방안이 실효적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이러한 토론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취업준비자가 희망하고 더 나아가 청년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정책지원방안이 무엇인지 다양한 고민을 통하여 실질적인 정책지원이 되었을 때 국민의 혈세와 정책의 실효성이 제 값을 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적인 정책지원 방안이 필요한 향후 4년 이내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지금에 도래한 초고령화사회 저성장 저출산 국가 인재운용방안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제적 국가 발전 모델 제시라는 프로세스라는 구성을 가지고 이 토론에 참여한 목적임을 밝힌다.

○ 청년, 취업준비자의 정의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에 의거 만15세 이상 만34세까지의 취업준비자

○ 기업, 채용의 의미

향후 6개월 생산 계획에 의거 ‘필요’인력에 대한 확보

위 두 조건의 교집합이라는 의미에서 기업의 일감확보가 채용에 출발점이라고 본다면, 결국 기업의 발전과 성장지원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취업준비자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설정된다고 볼 때, 취업준비자가 희망하는 직무와 기업에서의 체험 프로그램 발굴과 연결이 ①취업준비자의 정확한 진로설정으로 인한 9급 공무원 시험 22만 명 시대의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인재 등의 국가역량의 낭비를 줄이고 ②직무경험확보라는 니즈를 충족시킴으로서 취업준비자들이 원하는

스펙확보에 도움을 주고 ③취업준비자들에게 프로그램 내에서 확인된 자신의 진로와 재능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나아가 국가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틀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취업준비자 직무 기업 체험프로그램의 시작은 미국식 채용제도에서 그 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미국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의 경우 6개월의 기간을 두고 기업(직무)과 지원자 간의 과제와 프로젝트를 가지고 선발하는 process를 거쳐 최종 검증된 지원자를 채용하며, 그 과정에서 취업준비자에게 일정의 정책지원을 포함하는 것을 한국식 정책지원이라는 업그레이드 및 한국버전의 체험 프로그램이라 한다. 따라서 지금의 취업성공패키지 I, II 그리고 고용 디딤돌의 장단점에서 누락된 진로와 취업준비생의 니즈 충족이라는 업그레이드 방안을 가지고 정책을 지원할 경우 5년 뒤에 도래할 저성장 저출산 국가 인재관리론까지 정책이 연결되어 지속가능 국가경영에 또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은 더 큰 정책의 실효성이라 자신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형 직무기업 체험프로그램은 ncs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디딤돌의 장점을 결합하여 6개월간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특정의 운영기관의 공정한 운영과 평가를 통하여 일정 수준의 인재들을 1차 서류전형 통과라는 수료 후 자격을 제공함으로써 위 언급한 3가지 국가적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청년 취업준비자들에게 실제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 기 민
청년연대은행토닥 이사장

지금의 청년 실업은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결정판이다. 그 모순들은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한 가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청년 실업과 취업난은 과연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지원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취업을 하기 위해선 저질의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가란 질문에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일을 해도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워킹푸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적정 소득 보장 체계가 필요하며, 그렇게 애써 번 돈을 임대인에게 갖다 바쳐야 하는 상황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일자리/노동 환경은 시장에서 이탈하는 청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부조와 생활안전망을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대 국가는 문제와 해결책이 일대일로 매칭되는 세계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한민국 사회가 당면한 청년 실업과 취업난 역시 같은 맥락이다. 취업 지원 정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사안 대응적 정책을 고민하는 것 못지않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 또한 고민해야 하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야 한다.

현재 이 나라는 국가와 사회가 구성원들의 실패를 적극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로 수용함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무자비한 정글이다. 사회가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개인은 자기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고, 공무원이나 교직, 공단/공사 등 공공 부문은 현재 흡수저 청년들이 가장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다. 이를 두고 국가, 기업,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도전 정신을 잃었다고, 안정적인 삶만을 꿈꾼다고, 고액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비판하지만, 그에 앞서 이 시대 청년들이 선택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사람들이 결혼/출산하지 않는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자살하는 것은 오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안정적 일자리에 매달리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가 불안하고 위험하며 스스로 적정 수준의 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음을, 그런 상태에 놓인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지 않음을 반증한다.

그렇다면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 정부가 제도와 예산을 동원해 청년들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실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실패해도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해 저임금 일자리를 택한 노동자라도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해고되어 일자리를 잃거나 스스로 퇴사해도 다음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적정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노동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재취업 교육/훈련 제공한 뒤 양질의 일자리를 소개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우면 된다. 생애 첫 구직 과정 중에 있는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허덕이지 않을 수 있도록 기여나 고용이력과 관계없이 조세/제정을 기반으로 취업 전까지 취업 준비와 생계유지를 보장하는 적정 수준의 구직/취업 수당/급여를 제공하면 된다. 창업에 투자하는 공공/민간 기금이 활발히 조성되고 집행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창업자 개인의 대출과 부채로 연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환경 구축, 실패해 파산하더라도 성실히 노력하면 복권되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스템 마련은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다. 이 과정에서 각종 지원제도의 누수나 소위 ‘도덕적 해이’를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일자리를 구할 때 직업 안정성이나 임금 수준이 아닌 적성과 소질, 개인의 꿈과 목표를 바탕으로 원하는 일을 택할 수 있다면, 실직이 절망이 아니라 새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자본금이 많은 적든 참신한 아이디어와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누구나 창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보장한다면 저임금 일자리, 실직, 사업 실패는 공포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뜻하게 될 수 있다.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과 재정적 뒷받침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며 비로소 그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고민과 그에 바탕한 정책 집행 없이 취업 장려/지원 정책만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 참고문헌

-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와 정책 방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현 선임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신인철 기획연구실장)
- 내만복 제19대 대통령선거 복지공약 제안 3호 보도자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남재욱 정책팀장)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편

김 선 영
2030정책참여단 단원

본 논문에서는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를 다양한 조건, 유형별로 분석하여 보다 자세한 실태파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주재로 진행 된 실태조사에서는 청년 취업준비자를 경제활동 참여별,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 학력별 등으로 세밀하게 나누어 유의미한 집계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내용을 검토하며 논의하고 싶은 사항을 나열해 본다.

첫째, 청년층의 연령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청년층에 대한 연령 정의는 15세에서 29세가 기본이나, 현실적 세대를 고려함과 동시에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15세에서 34세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청년층을 15세에서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OECD 기준을 한참 초과한 정의이며, 절대적인 수치상으로도 20년 이라는 상당한 범위에 걸쳐있다. 실제 15세의 청년과 34세의 청년 간 천지차이인 삶의 행태를 고려할 때,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위한 정책은 디테일한 실효성을 갖기 힘들 뿐더러 단지 그럴 듯하게 들리는 생색내기 좋은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청년층의 연령 정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범위보다 좁혀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청년층을 세분화하는 신조어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중소기업과 청년층의 상생 방안에 대한 문제이다. 실제로 청년들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으로의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의 낮은 급여 수준 때문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급여와 복지 수준은 취업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률은 항상 제자리를 맴돌게 될 것이며, 중소기업은 계속적으로 인력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청년층이 원하는 임금 수준을 맞춰줄 수 없는 중소기업도 분명 존재한다. 그런 경우 청년층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피고용인 임금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의 노력으로 중소기업과 청년층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해야 한다.

셋째, 청년의무고용 대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실효성 문제이다.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필두로 하여 많은 정책에서 청년의무고용제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취업준비자나 기취업자가 체감하는 바에 따르면 이미 신규채용자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5%를 훌쩍 웃돌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년의무고용을 계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의미한 처사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수치적으로 5%의 청년을 의무로 취업시키는 것이 아니라, 취업전선에 있는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넷째,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4차 산업'과 관련한 문제이다. 지식집약적인 4차 산업의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예견된 미래이다. 이것은 앞으로 청년들이 차지할 수 있는 신규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소수의 일자리만이 보장되어 있을 뿐이다. 추후에 논의 될 청년 취업자를 위한 정책은 4차 산업이라는 키워드와 반드시 연관시켜야 하며 이와 관련한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청년 취업준비자를 위한 정책은 더욱더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가진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청년들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생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편

이 병 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문은 청년 취업준비자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토론자는 주요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실업자로 포착되지 않는 취업준비자가 더 많다. 이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고용정책을 넘어서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노동시장 경력이 없거나 전직 한 지 1년 이상인 자가 청년 취업준비자의 70%에 이른다. 거의 유일한 실업자 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셋째, 취업준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52.2%에 이르며, 평균 기간은 15.7개월에 이른다. 또한 자격증 취득, 외국어 및 전공 관련 학원 수강, 취업 동아리 및 스터디 활동 등의 다양한 취업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청년보장제도가 조기에 개입하여 일자리, 도제, 훈련, 계속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조치와 다른 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 청년들은 자구적으로 다양한 취업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취업준비 과정에서 70% 가까이 생활비 부담을 겪고 있으며,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율이 68.2%에 이르고, 10%는 금융기관 대출, 사채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족의존망으로 벗어나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구직수당에 대한 취업준비자들의 높은 찬성 의견과 함께 발표자들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 확대와 청년구직수당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경험이 없는 취업준비자들 16만명을 일차적인 정책 대상으로 1년 이내에서 청년구직수당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하여 청년의무고용 대상의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청년구직수당과 관련하여 토론하고자 한다.

성남시,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 경기도 등 지방정부들이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지원 목적과 대상은 차이가 있지만, 청년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한 점이 새롭다. 청년구직촉진수당에 대한 요구도 크다.

청년 구직자에 대한 소득 지원의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근로경력이 없거나 불안정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 지원이 부재하다. 소득과 결합하지 않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주로 제공되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지 않다. 인턴이나 훈련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계되는 성과가 크지 않고, 수당을 지원하는 특정한 프로그램에 편중되는 문제도 나타난다. 적절한 소득 지원이 고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 지원의 필요는 커진다.

문제는 어떠한 실업안전망을 구축할 것인가다. 토론자는 성격이 다른 기본소득이나 사회수당(demogrant)과는 별도로, 청년구직수당의 도입의 현실성과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를 제기하고 싶다. 발표자들은 노동시장 경험이 없는 취업준비자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예시하였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나 노동시장 경력을 가진 자에 비해 우선할 수 있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2016년 15-29세로 청년의 연령층을 좁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나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구직 NEET’는 청년 인구의 9.7%(914천명)에 이른다. 가구소득, 구직기간 요건 등을 설정하지 않는 청년구직수당을 도입할 경우 신청하는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표 1〉 15-29세 청년 NEET 규모 (2016)

(단위 : 천명, %)

			계	(인구 대비 구성비)	(비재학자 대비 구성비)
인구			9,427	(100.0)	
	재학		4,192	(44.5)	
	비재학	취업	3,458	(36.7)	(66.0)
		실업(A)	385	(4.1)	(7.4)
		잠재 경제활동인구(B) ¹⁾	529	(5.6)	(10.1)
		순수 비경활(C)	864	(9.2)	(16.5)
NEET(A+B+C)			1,778	(18.9)	(34.0)
구직 NEET(A+B)			914	(9.7)	(17.5)

주 1)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비경제활동인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병희, 2017에서 인용)

청년 니트의 특성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부조, 청년활동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용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다만, 토론자는 사회보장의 발전 경험이나 사회적 보호의 우선적인 과제를 고려하면,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청년 취업준비자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편

이 철 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본 논문은 최근 우리사회에 이슈화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흔히 언론에서 언급하는 청년실업문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의 청년실업률을 자주 언급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청년실업자 들, 즉 비경제활동인구상의 취업준비생과 일자리를 얻었으나 고용안정성이나 근무시간이 부족한 질 낮은 일자리에 속한 청년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2017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실시한 온라인조사,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를 분석해 실업률 등 일반적인 통계작성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청년실업자 규모를 파악하였고,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해 볼 문제는 준 실업자 형태에 놓인 취업준비생의 규모 추정이 정확한가 하는 것과, 취업준비생의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청년수당이나 실업부조 등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정부가 청년수당을 취업준비생에게 제공한다면 모든 취업준비생에게 주어야 하는가 문제와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포함해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취업준비생의 규모와 관련해서 본 토론자는 규모가 약간 과소평가 되었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연구자들은 취업준비생 규모 측정에 있어 15~34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0~35시간 시간제 취업자 10.4만 명과 15~34세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생 53.7만 명을 합쳐 총 64.2만 명이 취업준비생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대학에는 취업준비를 위하여 휴학 등 졸업을 미루고 있는 졸업유예자들이 존재한다. 2016년에 발표된 김지경 외(20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졸

업유에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약 4.8~10.4만 명으로 추산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포함한다면 취업준비생은 적어도 69만 명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여기에 16년 기준 청년실업자 54.3만 명을 포함할 경우 청년고용정책의 대상은 약 12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둘째는 그렇다면 ‘사지가 멀쩡한 청년들이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가?’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현금급여를 주지 말아야한다는 논쟁은 끝난 것으로 보여진다. 본고에서 발표한 것처럼 취준생 중 약 70%가량이 노동시장을 이미 경험했고, 이로 인해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 수령자가 상당부분 존재하고, 2014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중 15~29세 청년이 전체 수급자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이미, 소득보장 측면에서 청년들은 정책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롭게 청년수당이나 청년대상의 실업부조를 도입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는 취업준비생 등 경제구조로 인한 일자리 창출여력과 소득보장 측면서 어느 정도 청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가하는 규모와 직접 관련해서 검토할 문제이다. 우선, 2015년 기준, 민간시장의 일자리 창출 여력에서 한국的高용보험 가입기업은 연간 20~34세 청년들을 신규와 경력을 포함해 약 9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나, 신규 가입자가 15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고용보험통계연보, 2015). 반면에 대학을 졸업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은 약 55.7만 명이고, 취준생 25.5만 명, 실업자 20.1만 명을 포함하면 공급은 약 100만 명에 이른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교육부 취업통계연감). 문제는 대졸 후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로 취업하는 청년비율이 약 27%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청년들은 첫 직장을 거친 다음에 두 번째 직장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년들은 장기간의 취업준비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에서 직장을 얻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25~34세 청년들 중 소득수준이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비중이 25.4%(약 180만 명)에 이른다. 이중 20%인 36만 명 정도는 부모에게 속한 켄거루족이다(이철선 외(2016)). 결국 청년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직장을 구했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적정한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점차 청년들이 빈곤에 빠지거나 청년들이 속한 가구의 부모들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약 180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청년가구의 빈곤방지와 미래의 인적자산에 투자라는 관점에서 청년에 대한 현금급여 방식의 정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주의할 부문은 모든 취업준비생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자산소득에 근거한 지원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이나 현금 급여 시, 예산은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최근 동아일보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청년예산은 약 12조원에 달한다. 이중 장학금 등 청년 직접대상의 소득보장

예산은 49.5%(5.8조원)이었고, 행복주택 등 청년주거지원은 21%(2.5조원), 직접 일자리 조성 등은 1.5%(1,810억원) 이었다. 그런데 청년들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이나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28%(3.3조원) 정도였다. 기업들이 졸업 후 신규노동시장 진입자들은 채용하는 비중이 27%(15만 명)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과 기업 대상으로 청년 고용지원 정책에 대한 예산액과 비중이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효과성이 낮다면 오히려 그 예산을 청년들의 직접일자리 창출과 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김지경 외(201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고용정보원(2015), 고용보험통계연보
- 이철선 외(2016), 청년지원정책 입법사례 및 한국의 청년 및 청년가구 지원 정책 제도화 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청년정책포럼 추진실적(2016년-2017년)

□ 제1차 청년정책포럼

주제 : 2025년 대한민국 청년의 삶을 전망하다
일시 : 2016. 2. 22(월) 10:00-12:00
장소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컨퍼런스홀

□ 제2차 청년정책포럼

주제 : 지역 청년 일자리 실태와 정책 방안
일시 : 2016. 5. 17(화) 10:00-12:00
장소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관

□ 제3차 청년정책포럼

주제 : 청년 취업취약계층 실태와 정책과제
일시 : 2016. 6. 28(화) 10:00-12:00
장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대회의실

□ 제4차 청년정책포럼

주제 : 산학협력을 통한 청년 일자리 기회 창출방안
일시 : 2016. 8. 24(수) 10:00-12:00
장소 :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 제5차 청년정책포럼

주제 : 청년창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일시 : 2016. 10. 12(수) 10:00-12:00
장소 : 팁스타운 팁스홀

□ 제6차 청년정책포럼

주제 : 2017년 청년 일자리정책 진단 및 대응방안
일시 : 2016. 12. 7(수) 10:00-12:00
장소 :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대청마루

□ 제7차 청년정책포럼

주제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현황과 과제
일시 : 2017. 2. 23(목) 10:30-12:30
장소 : 광주광역시 아이플렉스광주 스타트업빌

M/E/M/O

M/E/M/O

_____ M/E/M/O _____